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공조 도정현안 해결

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자동차 등 주력 체질 개선
융복합 미래신산업 등
분야별 타깃 선정 대응기로

전북도가 지난 2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 사업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심사(11.2~29)가 본격 돌입하는 시기에 앞서 정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 현안사업,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한목소리(one-voice)를 내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9명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새만금 잠머리 성공 개최 기반구축 사업 등 분야별 타깃사업을 선정, 국회단계에 집중 대응하여 전북 대도약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심사단계에서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중점 활동 사업을 살펴보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융복합 미래 신산업활성화) '스마트 특장산업클러스터 조성'에 70억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5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0억원 등 지역경제 체질개선 사업 국회단계 반영 건의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잠머리 대회 성공개최 기반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 및 2023 새만금세계잠머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4,000억원, '동서 남북도로' 3,200억원 등 새만금 SOC 사업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등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 중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15억원, '중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처리시설 구축' 5억원, '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 30억원 ▲(문화 ICT 콘텐츠 등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육성) 2023 새만금 세계잠머리 성공개최의 필수 기반시설인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 등으로 50억원,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73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SOC 확충을 통한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새만금,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예타 시행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0억원,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 40억원, '인계~쌍치 국도 개량' 40억원 등 반영 ▲(예타사업 예산 확보) 가력선착장이 협소하고 포화상태로 수용이 불가능하여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이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 반영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군과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연구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단군 소망은 평화와 번영”

이낙연 총리 개천절 경축사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개천절인 3일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4360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이런 꿈이 실현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기를 요청드리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세계에 격정을 끼쳤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발신지로 바꿔 세계에 공헌하려 하고 있다”며 “북한도 핵을 지니고 고립과 궁핍을 견디기보다는,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신생 대한민국은 식민 착취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면서 “시대에 따라 기복이 있었지만, 남북대결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세계가 찬탄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만도 세 차례나 남북정상 회담을 열어 지구 최후의 냉전체제를 허물고 있다”며 “한반도에 완전

“한반도, 동북아 화약고에서 평화번영의 발신지로 변화 문 정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 여정 나서”

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며 민족 공동번영을 시작하려는 담대한 여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이런 시기에 맞은 올해 개천절에 우리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을 다시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께서 바라는 대로,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는 나라로 발전할 큰 기회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올해 9월 우리의 국가목표로 ‘포용국가’를 선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설명하신 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나라’가 포용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포용국가로 가려면 정부와 정치가 제도를 만들어 이끌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하실 일도 많다.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돕는 일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용국가의 길을 정부는 착실히 가겠다. 정치와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 이것 또한 단군 할아버지께서 꿈꾸신 홍익인간의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뉴스

靑 “폼페이오 방북, 북미대화 가속도… 실질적 논의 기대”

“날짜·장소 윤곽 나왔으면”

청와대는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방북에서 실질적인 대화들이 오고하기를 바란다”며 방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 “북미 양자 간에 대화가 정상궤도로 올라갔고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 앞서 헤더 나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7일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난 뒤 곧바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북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북 성과를 공유한다. 이후 베이징을 찾아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여부”라면서 “방북 기간 중에 날짜와 장소에 대한 윤곽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과 미국에 공이 넘어갔으니 문 대통령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에서의 핵심 의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간·장소 외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진전에 대한 합의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6·12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중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MB정부, 사찰 대상 민간인 구속 압박”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수사책임자 ‘외압’ 증언 확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민간인 사찰 대상자 수사책임자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조사단에 따르면 KB한미은행 김종익 전 대표를 수사했던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심모씨는 최근 조사단에 국무총리실이 구속 등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냈다.

신씨가 김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려고 하자 총리실 측에서 불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총리실이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강요했고, 거부하자 귀가를 막는 등 압박이 거세져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결국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